

# AI 서울 정상회의, 안전·혁신·포용 '서울선언' 채택

### 윤 대통령·영국 수석 총리 공동 주재...미국·일본 등 20개국 참석 "인간 중심 AI 활용 국제 난제 해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리스 수석 영국 총리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공지능(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AI 안전을 논의했고, 후속 회의인 이번 서울 회의는 혁신과 포용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유엔 총회의 AI 결의안, 주요 7개국(G7) 차원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의 안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AI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AI의 커다란 잠재력을 구현해 내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 개발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거주지역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도록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대표들은 AI가 갖는 위험 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 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정상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정상들은 '서울선언'에서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은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

제 논의에 이들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안전한 AI를 보장하기 위해 AI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폭넓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법과 AI 거버넌스 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며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체들에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AI 안전 연구소와 프로그램, 감독기관 등을 설립하기 위한 참여국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 중심적인 AI를 활용해 국제 난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주의, 인권·기본적 자유, 사생활 보호 등을 증진하며, AI-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향상하자"며 AI 안전·혁신·포용성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글로벌 AI 선도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AI를 개발하겠다는 안전 서약을 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말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로린스 왕 싱가포르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 위원장이 참여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일정상 정상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서울선언 채택에 참여했다. 국제기구 대표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글로벌 AI 기업에서는 에릭 슈미트 슈미트재단 설립자,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회장,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아서 멘스 미스트랄 AI 회장, 안나 마칸주 오픈AI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웹-서비스 부회장, 닉 클레그 메타 사장, 일본 머스크 xAI 설립자 등이 함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아시아인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단상을 바라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나경원 "전대시기 결정되면 출마 고민"

### "전대 물 민심 조금 반영해야"... '직구 논쟁'엔 거리두기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22일 "전당대회 시기가 결정되면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당의 미래와 22대 국회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 내가 꼭 대표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어 "대진표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누가 당 대표를 하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될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 선출 방식 등 전대 물 개정 문제에 대해서 "민심을 조금 집어넣을 것 같고, 그게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나 당선인은 정부의 '해의 직접구매(직구)' 규제 혼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추가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18일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정부의 섣부른 정책 발표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심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나 당선인을 포함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겨냥했고, 나 당선인을 제외한 3명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한 전 위원장, 유 전 의원과 달리 나 당선인이 이번 시안에 집중하는 것은 잠재적 당권 경쟁자로 분류되는 이들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직구 처단을 사실상 철회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당내 분란을 키울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직구 논란' 당정대 정책협의회 신설...주 1회 정례화

### 정책 조율·사전협의 강화

여권의 삼각 축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책실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당정대 정책협의회는 매주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별도의 실무 협의회도 상시 가동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3차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기로 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

의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앞서 당정대는 국무총리와 당 대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 협의회'를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동해왔지만, 당정 간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가중돼온 가운데 이번 직구 논란이 터지자 정책 조율에 초점을 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하게 됐다.

이는 직구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내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 "시스템 완비돼야"

대통령실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을 철저히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최고 기독교 선교병원



## 광주기독교병원

### Kwangju Christian Hospital



**재단이사장**  
주계옥



**병원장**  
이승욱

